

건축도시공간 정책을 위한 주춧돌을 마련하다

유광홍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간문화연구본부장

건축 관련 법제의 방향성 정립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개소 이래 우리나라 건축·도시공간의 변화를 이끈 많은 정책대안을 마련해 왔다. 일반적으로 정책대안은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해 채택 가능한 여러 정책안을 말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은 해결해야 하는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제약 등을 종합하여 정책목표를 세우고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집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수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치나 기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실행수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합하여 부르는 말이다. 따라서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률과 관련 하위규범을 제정 또는 정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정책목표를 구체화하고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제정된 법은 활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한 조문을 통해 실효성을 획득하게 되며, 건축 관련 법령은 사회변화나 기술발전과 같은 시대흐름을 반영함으로써 목적과 역할에 부합하게 된다.

2007년 연구소 개소 당시 건축 관련 법률은 「건축법」과 「건축사법」이 건축 관련 법과 제도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건축 관련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건축법」은 1934년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근거하고, 1962년 제정된 이래 부분개정이 누적된 대표적 구시대 체계의 법률이었다. 1963년 제정된 「건축사법」 또한 건축사 자격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제한적 범위를 규율하고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전반적으로 건축 관련 법제는 복잡한 입법체계와 범규범으로서의 방향이 모호하고, 법집행자가 운용하는 데도 혼란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었다. 또한 관련 법령들과의 체계적 통일성이나 상호연관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점증적으로 누적되어 복잡하고 별개적이며, 정합성이나 상호연관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와 여건변화에 따른 건축 관련 법제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었다. 그리고 성장지상주의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로 전환되어 쾌적한 건축·도시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었고, 물리적 환경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로 인해 대량공급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탈피한 새로운 건축정책의 방향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 전환 요구는 2008년 시행된 「건축기본법」에 의해 건축문화의 진흥과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에 대한 방향이 제시됨에 따라 건축 관련 정책의 수단으로서 법제의 체계적 정비에 대한 필요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다.

건축·도시 관련 법 제정과 주요 연구성과

2007 「건축기본법」

- 2016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전라남도)
- 2015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국토교통부)
- 2015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
- 201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세종특별자치시)
- 2014 충청남도 건축관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충청남도)
- 2013 국가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발전방안 연구
- 2012 건축도시디자인 및 경관 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국토교통부, 매년)
- 2012 건축정책 성과보고서 작성 연구(국토교통부)
- 2012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전라북도)
- 2011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경기도)
- 2009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전략과 추진과제 연구(국토교통부)
- 2009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관리운영(국토교통부, 매년)
- 2009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국토교통부)

20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2014 용도지역제도를 고려한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정책 연구
- 2014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지침 마련 연구
- 201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연구
- 201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연구(국토교통부)
- 2011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방안 연구

2014 「경관법」

- 2014 경관 정책 기본 계획 수립 및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연구(국토교통부)
- 2012 건축·도시 디자인 및 경관 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국토교통부)
- 2009 경관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201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2015 건축사 역량 강화 및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마련 연구
- 2013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 연구
- 2013 국가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발전방안 연구
- 201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2)
- 201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
- 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국가건축정책위원회)
- 201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1)
- 2010 건축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연구
- 2010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건축프로세스 개선 및 이미지 효율 제고 방안(국토교통부)
- 2010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교육 선진화 방안(국토교통부)

201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015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을 위한 주요 쟁점 분석
- 201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마련 연구(국토교통부)
- 2014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
- 2013 건축자산의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 2013 한옥의 특성을 고려한 인증제도 도입 방안 연구
- 2012 지역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리기반 마련 연구(국토교통부)
- 2012 한옥 등 건축자산의 관리 및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지원 연구

20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15 도시재생사업 종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국토교통부)
- 2015 도시재생 사업 지원 및 관리 등을 위한 연구(국토교통부)
- 2015 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 2014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을 위한 용역(국토교통부)
- 2014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사례 및 중장기 운영방안
- 2013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례 연구

건축·도시 관련 법적 기반 구축과 지자체의 계획 수립 지원

그동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건축 전반의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기반하여 유효하고 실질적인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제반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건축·도시공간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법령의 제·개정 및 세부 시행을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건축기본법」을 시작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적 기반 마련은 물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건축·도시공간 관련 국가기본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개소 이래 지금까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건축·도시공간의 가치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립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나라의 건축·도시공간 관련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과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여 왔다. 이러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노력은 우리나라의 건축·도시공간이 보다 살기 좋고 품격 높은 곳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유광흡·진현영(2010), 「건축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 유광흡 외(2012), 「지역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리기반 마련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